

“진상규명·명예회복 길 열렸다...73년 억울함 풀어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민 반응

“죄인처럼 숨어 지낸 통한의 세월...이젠 진실 제대로 밝혀야” 유족·시민단체들 환영 속 재단 설립 등 누락된 부분 아쉬움 실무위 직권 조사 권한 부여하고 배·보상 담은 법 개정 필요

“73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한을 풀게 돼 가슴이 너무 벅잡니다.”

29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순사건 피해자와 지역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에서 누락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개정을 통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3년 만의 한, 드디어 풀었네”-특별법 통과 소식을 접한 유족들도 이례대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세 살 때 여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순천지역 유족인 박병찬씨는 “1948년 동짓달 스무날 순천 외서면 금성마을회관 앞에서 사람들을 두들켜 때면서 ‘빨갱이가 누구냐’며 손가락질로 자폭하라는 군인들의 폭력에 못이겨 내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이 지목돼 희생됐다”면서 “당시 30살던 어머니 홀로 고생해서 누님 2명과 나를 이렇게 키워내고 지난 2016년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으면 너무나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족들은 지난 세월동안 피해자들임에도 불

구하고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단 한분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으로 친형·고종사촌 형·외삼촌이 희생된 여수지역 유족 황순경 씨도 특별법 통과를 ‘감개 무량’하다고 했다.

황씨는 “철도 공무원인 형님은 퇴근을 하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고종사촌 형은 여수시민회관 앞 회사에서 퇴근길에 희생당했다. 순천 경찰서에 근무하던 외삼촌 역시 당시 14년대 군인들과의 교전에서 총에 맞았다”면서 “73년동안 3명의 가족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한을 풀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국가 폭력에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 명예를 이세대에 회복하게 돼 기쁘다”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족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밝혔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여수지역 역사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특별법 통과를 여순사건 이후 73년만인 연구소가 관련 문제를 공론화 하지 23년만의 일”이라며 “그동안 계속되는 도



29일 오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유족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아쉬운 점은 서둘러 보완해야-특별법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고향의 유족들이 살아 생전,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 회복과 위령시설 확보 및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주 4·3도 실무위원회 조사를 위주로 진

행하다보니 12년간 5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실무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신청인의 신청을 받고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별법에서 재단 설립 부분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들 모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 차원의 단체가 만들어져야 추후 추모행사와 각종 기념행사 등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게 이들 지적이다.

순천대 여순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 사

건은 국가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제주 4·3,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 5·18의 역사적 무게에 상응하는 사건”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생존하는 고향의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씻겨줄 배·보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 등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시는 30일 만성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석면 철거공사 감리 절차도 부실했다

일반건축물 철거감리자 선정 앞두고 공무원 청탁 전화도 확인 지분조개기 여부 등 조사...경찰 다음달 초 1차 수사결과 발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일반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석면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감리 절차도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감리자 선정을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의 청탁 전화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조합측의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과 지분조개기 여부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알았는지 보완수사를 거쳐 관련자 신병 처리 여부 및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불러 일반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한술·백술 간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한술·다원 간 이면 계약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기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

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혐의를 확정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석면 철거 과정에서의 감리자의 부실한 감리 정황도 일부 확인,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석면 철거의 경우 감리자가 상주해서 살펴야 하지만 학동 4구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석면 철거공사 감리자와 관리·감독을 맡은 동구청의 위법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재개발조합측의 석면·지장물 철거, 기반시설 정비, 범죄예방·이주자관리 등을 위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합 관계자들의 지분 조개기를 통한 부당산 투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감리자 지령과 관련, 청탁성 전화를 한 인물로 전·현직 공무원을 특정해 조사하는 등 사고 발생 한

달이 되는 다음달 8일까지 1차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에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고 규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 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광주경영자총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들 동결안”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2명), 근로자위원(9명), 특별위원(3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노동계는 “사용자위원들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법원이 제동

잇단 위법 판단에도 비공개...불기소사건 등사 불허 처분 취소 판결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우면서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일각에서는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이 행정규칙을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만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검이 A씨에 대해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개인정보를 뺀 관련 사건 서류 등사(복사)를 신청했다가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 2호)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내부 규칙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이번 사건까지 6개의 유사 사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애초 개인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없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없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 걱정이 없다.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